

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
1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금융기관에게 2018. 1. 30.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당국의 우월한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② 음주운전의 전범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 음주운전 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- ③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한 「도로교통법」제148조의 2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.
- ④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노역장유치는 보안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
2.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이다.
-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
-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확정된다.

3.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.
- ②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③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.

4.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친일재산을 그 취득·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만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다.
- ②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신뢰보호의 관점은 입법형성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.
- ③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면,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다.
-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
5.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.
- ② 「지방계약법」상 수의계약 상대방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법률로써 이를 직접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강하다.
- ③ 체계정당당의 원리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.
-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 규범과 전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6.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②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③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.
- ④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.

7.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상하 50%(인구비례 3:1)이다.
- ②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므로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.
- ③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.
- ④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이다.

8.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.
-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'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'의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.
- ③ 최저임금제도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.
- ④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, 유통구조,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.

9.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「산업재해 보상보험법」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- ②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- ③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.
- ④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아니다.

10. 조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·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- ② 「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」는 조약이 아니다.
- ③ 개별 법률의 적용 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,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.
- ④ 조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.

11.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.
- ③ 주민소환제는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.
- ④ 제도적 보장은 '최소한 보장의 원칙'이 적용된다.

12.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진정에 대한 조사·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13.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.
- ②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.
- ③ 구 「국가보안법」상 불고지되는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.
- ④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양성 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.

14.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.

- ② 고시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된다.
- ③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
- ④ 징벌대상자로서 조사 중인 수형자와 변호인 아닌 자가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한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.

15.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.
- ② 헌법해석상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위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임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.
- ③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기본권 제한 관련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④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.

16.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.
-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「형사소송법」 제224조는 직계비속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.
- ④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자 측에게는 재심을 허용하면서, 가해자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가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.

17.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「정신보건법」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.
- ②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형법」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벌금형을 규정한 조항은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.
- ④ 구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규정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한 후 구 「조세범처벌법」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 관련 조세포탈로도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

18. 거주·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거주·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.
- ②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인 경우 신변 위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.
- ③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.
- ④ 서울광장을 버스차벽으로 둘러싸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·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.

19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.
- ②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

권을 형제자매에게 부여하는 「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」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.

- ③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의 제조·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감청설비를 보유·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- ④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‘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’의 제한은 아니다.

20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의료광고를 사전에 검열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신체·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옥외집회·시위가 사전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」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.
- ③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가 가장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.

문항	정답
1	④
2	④
3	①
4	④
5	②
6	②
7	②
8	①
9	①
10	④
11	②
12	①
13	③
14	①
15	④
16	④
17	②
18	④
19	④
20	①